



2021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개요

□ 추진목적

- 연구원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하여 연구원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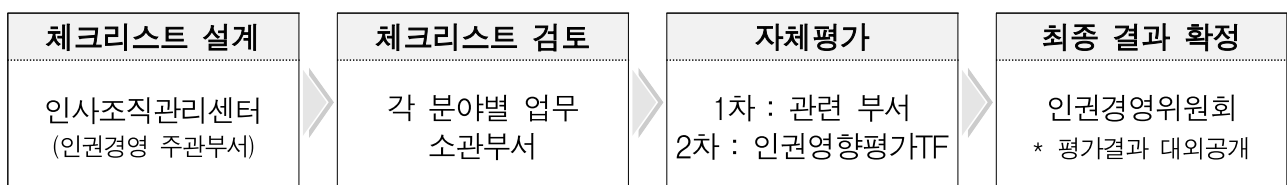
□ **평가원칙** :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정보접근성 등을 평가의 기본원칙으로 함.

□ **평가기간** : 2021.12. 8(수)~12.22(수)

□ 평가방법

- 각 부서별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체 평가결과 제출
- 인권영향평가 TF 구성(부서별 1인, 노조대표, 외부전문가)하여 체크리스트 각 지표별 추진 여부에 따라 부여한 점수를 확인하고, 항목별·종합적 결과 도출

□ 평가절차 및 시행주체



□ 인권영향평가위원

- 인권영향평가 TF 구성
 - 위원장 : 오은진 부원장
 - TF 위원
 - (내부) 김둘순 연구위원, 배호중 부연구위원, 장희영 연구원, 정은혜 행정원, 이단비 행정원
 - (노조대표) 김효정 부연구위원
 - (외부) 정경원 육아정책연구소 경영지원사무국장

□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 기관운영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표준(안)으로 평가 10개분야 97개 지표

○ 주요사업 : 우리원에서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을 토대로 7개 지표

○ 각 지표별 추진실적의 평가기준 충족도 평가

구분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점수	2점	1점	0점

1) 각 분야별 총점(모두 예로 평가되었을 경우의 점수)과 획득점수를 백분율로 계산

2) 분야별 총점을 평점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적용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평균점수	90~100	80~90 미만	70~80 미만	60~70 미만	50~60 미만	40~50 미만	30~40 미만	20~30 미만	0~20 미만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점검회의를 통해 우리원에 관련 없는 항목은 삭제 및 조정하여 '정보없음'과 '해당없음' 응답을 삭제함.

2. 종합 평가결과

1) 점검결과 종합(집계표)

<기관운영>

○ 평가결과 : 92.3점/ 1등급(총 10개분야, 24개항목, 97개 지표)

항목	이슈	총계	답변결과			환산점수 (등급)
			예	보완필요	아니요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5	18(36)	7(7)		86 (2등급)
2	고용상의 비차별	10	10(20)			100 (1등급)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4	14(28)			100 (1등급)
4	강제 노동의 금지	8	8(16)			100 (1등급)
5	아동노동의 금지	3	3(6)			100 (1등급)
6	산업안전 보장	13	13(26)			100 (1등급)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7	4(8)	3(3)		78.6 (3등급)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3	3(6)			100 (1등급)
9	환경권 보장	4	4(8)			100 (1등급)
10	소비자인권 보호	10	5(10)	5(5)		75 (3등급)
합 계		97	82(164)	15(15)		92.3 (1등급)

< 주요사업 >

구분	이슈	답변결과			
		예 (2점)	보완필요 (1점)	아니요 (0점)	점수 (등급)
1	연구인력의 인권보호(5)	5(10)			100 (1등급)
2	공정한 연구관리 및 확산(2)	1(2)	1(1)		75 (3등급)
합 계(7)		6(12)	1(1)		92.9 (1등급)

2) 평가결과 요약

<기관운영>

- 전년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인권경영위원회의 평가를 토대로, 관련 부서장 및 부서원을 대상으로 체크리스트 설명회 및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수정
 - 수정된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2021년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총 10개분야 97개 지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종합점수는 92.3점(1등급)으로 기관운영의 전반적인 인권리스크는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지만, 지표별 편차가 있어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함.
-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 노동의 금지’, ‘아동 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는 전년에 이어 올해도 인권리스크가 잘 관리되는 항목으로 평가되었고, ‘환경권 보호’는 전년도와 달리 인권리스크가 잘 관리된 항목으로 평가되었음.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소비자인권 보호’의 항목은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됨.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소비자인권 보호’ 항목은 전년에 비해 점수가 낮아진 항목으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2022년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항목임.

<주요사업>

- 주요사업의 인권영향평가 항목중 ‘연구인력의 인권보호’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나, ‘공정한 연구관리 및 확산’에 있어서 외부 위탁기관의 선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됨.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평가항목을 확대하여 좀더 세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매년 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 비교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됨.

3) 조치 및 추진계획

- 점검결과 미흡한 지표에대한 보완 조치 계획 수립 : 2022년 1/4분기
-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전사 교육 시행 : 2022년 2/4분기
 - 인권영향평가 실행 전 평가 참여자에 관한 별도 교육 선행
-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수립 및 평가 실시 : 2022년 4/4분기

3. 분야별 세부 점검 현황

<기관운영>

▶ 분야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2등급(86.0)

연번	세부항목(지표개수)	응답개수(점수)			
		예 (2)	보완필요 (1)	아니요 (0)	점수 (백분율)
1	인권존중 정책선언(5)	5(10)		-	100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3)	3(6)		-	100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4)	4(8)		-	100
4	인권경영 성과(7)		7(7)	-	50
5	구제절차 마련(6)	6(12)		-	100
합계(25)		18(36)	7(7)	-	86.0

▶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 1등급(100)

연번	세부항목(지표개수)	응답개수(점수)			
		예 (2)	보완필요 (1)	아니요 (0)	점수 (백분율)
1	고용상 비차별(7)	7(14)			100
2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3)	3(6)			100
합계(10)		10(20)			100

▶ 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1등급(100)

연번	세부항목(지표개수)	응답개수(점수)			
		예 (2)	보완필요 (1)	아니요 (0)	점수 (백분율)
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4)	4(8)			100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5)	5(10)			100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5)	5(10)			100
합계(14)		14(28)			100

▶ 분야 4. 강제 노동의 금지 : 1등급(100)

연번	세부항목(지표개수)	응답개수(점수)			
		예 (2)	보완필요 (1)	아니요 (0)	점수 (백분율)
1	강제노동 금지(8)	8(16)			100
합계(8)		8(16)			100

▶ 분야 5. 아동노동의 금지 : 1등급(100)

연번	세부항목(지표개수)	응답개수(점수)			
		예 (2)	보완필요 (1)	아니요 (0)	점수 (백분율)
1	연소자 고용 금지(3)	3(6)			100
합계(3)		3(6)			100

▶ 분야 6. 산업안전 보장 : 1등급 (100)

연번	세부항목(지표개수)	응답개수(점수)			
		예 (2)	보완필요 (1)	아니요 (0)	점수 (백분율)
1	사무실 안전(6)	6(12)			100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4)	4(8)			100
3	근로자 건강진단 및 지원(3)	3(6)			100
합계(13)		13(26)			100

※ 연구원 환경에 맞게 '작업장'에서 '사무실'로 항목명 및 지표 수정

▶ 분야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3등급 (78.6)

연번	세부항목(지표개수)	응답개수(점수)			
		예 (2)	보완필요 (1)	아니요 (0)	점수 (백분율)
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3)	3(6)			100
2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4)	1(2)	3(3)		62.5
합계(7)		4(8)	3(3)		78.6

▶ 분야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 1등급 (100)

연번	세부항목(지표개수)	응답개수(점수)			
		예 (2)	보완필요 (1)	아니요 (0)	점수 (백분율)
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1)	1(2)			100
2	지적재산권 보호(2)	2(4)			100
합계(3)		3(6)			100

▶ 분야 9. 환경권 보호 : 1등급 (100)

연번	세부항목(지표개수)	응답개수(점수)			
		예 (2)	보완필요 (1)	아니요 (0)	점수 (백분율)
1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2)	2(4)			100
2	비상계획 수립(2)	2(4)			100
합계(4)		4(8)			100

▶ 분야 10. 소비자인권 보호 : 3등급 (75)

연번	세부항목(지표개수)	응답개수(점수)			
		예 (2)	보완필요 (1)	아니요 (0)	점수 (백분율)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2)	2(4)			100
2	제품결함시 조치(2)		2(2)		50
3	소비자 사생활 보호(6)	3(6)	3(3)		75
합계(10)		5(10)	5(5)		75

<주요사업> : 1등급(92.9)

연번	세부항목(지표개수)	응답개수(점수)			
		예 (2)	보완필요 (1)	아니요 (0)	점수 (백분율)
1	연구인력의 인권보호(5)	5(10)			100 (1등급)
2	공정한 연구관리 및 확산(2)	1(2)	1(1)		75 (3등급)
합계(7)		6(12)	1(1)		92.9 (1등급)

4. 총평

<기관운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기업의 인권 보호 및 존중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공공기관으로서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및 존중의무를 실천하고자 2019년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2021년 인권영향평가는 각 직급별, 부서별 인원을 안내하고,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고자 하였음.
- 종합적인 평가결과는 기관운영 92.3점(1등급)으로 전반적인 기관운영에 있어 인권침해 여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평가됨.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소비자 인권 보호’ 항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일부 지표에 대하여 2022년 상반기 중 개선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아울러 지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체크리스트를 보완하도록 하겠음.
- 인권영향평가 TF를 통해 체크리스트 항목 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 바, 2022년 상반기 중 체크리스트 항목을 보완하여 개선을 하는 것이 요구됨.

- 분야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의 경우 인권경영과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구분이 필

요하고, 이를 항목에 반영하여 답변시 혼란이 없도록 정리하는 것 필요할 것임.

- 분야 1-4. 인권경영 성과 중 1-4-5 ‘보고는 연구원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는 연구활동 전반을 의미하는 것인지, 인권 관련 내용에 한정할 것인지 등 ‘연구원의 활동’ 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 있음. 0
- 분야 1-4-2, ‘성과 확인시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와 1-4-7 ‘보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검토해 볼 필요 있음. ‘의견수렴’ 과는 별도로 ‘보고내용에 대한 검증’ 이 필요하다면, 그 방법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누구에게 어떻게 검증받을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하는 것 요구 됨.
- 분야 10. 소비자 인권 보호 : ‘소비자’ 용어 사용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 있음. 해당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면 ‘소비자’ 가 누구를 의미하는 지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예) “이때 소비자는 ~~~를 의미한다.”

- 전년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어 전년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환산점수로 100점을 획득한 항목이 전년도 7개 항목에서 당해연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의 경우 2년 연속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선정이 된 바, 2022년도에는 체계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됨.
- 2022년에는 전년도 평가결과와 당해연도 점수 비교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 비교분석을 통해 점수가 하락된 항목과 개선된 항목의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연구원 사정에 맞게 수정된 체크리스트로 평가하였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절대적인 지표로 평가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타기관 수준과의 비교도 불가하나, 체크리스트를 향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매년의 결과를 토대로 당해연도 연구원의 수준 및 문제점 파악이 용이할 것으로 보임.

<주요사업>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의 경우 2021년 2/4분기 중 주요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기본과제를 중심으로 2021년부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함. 아직은 지표내용이 초보수준이어서 2022년은 지표분야와 내용을 확대하여 심도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요구됨.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의 범위를 기본과제로 한정하여 시범실시한 바 2022년은 보다 주요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전 사업에 걸쳐 인권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붙임 1. 2021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1부. 끝.

<참고자료 : 전년도와 비교평가>

- 2020년은 총 10개분야, 25개항목, 101개 지표이고, 2021년은 총 10개분야, 24개 항목, 97개 지표로 지표의 수가 변동되어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총점을 비교할 때 전년도에 비해 4.4%p 낮아졌음.
- 이는 분야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에 있어 보안담당 외주업체의 인권보호와 관련한 직원 교육 및 모니터링에 대한 확인이 불분명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점과 분야 10. 소비자인권 보호에 있어 제품결합시 조치와 소비자 사생활보호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소극적으로 평가되었음. 현재 개인정보보호라는 이름으로 정보수집 및 관리지침이 공개되어 있는데 소비자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와 닿지 않고, 기관의 현황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구성원들에게 인지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로 향후 기관차원의 홍보 노력이 필요해 보임.
- 분야 9. 환경권 보호는 전년도에는 보완이 필요한 지표가 있었으나 올해는 이행이 잘 된 것으로 평가되었음. 2022년은 친환경 실천을 통해 이 분야를 생활 속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임.

항목	이슈	총계	답변결과			환산점수 (등급)	2020년
			예	보완 필요	아니요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5	18(36)	7(7)		86 (2등급)	80.0 (2등급)
2	고용상의 비차별	10	10(20)			100 (1등급)	100.0 (1등급)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4	14(28)			100 (1등급)	100.0 (1등급)
4	강제 노동의 금지	8	8(16)			100 (1등급)	100.0 (1등급)
5	아동노동의 금지	3	3(6)			100 (1등급)	100.0 (1등급)
6	산업안전 보장	13	13(26)			100 (1등급)	96.3 (1등급)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7	4(8)	3(3)		78.6 (3등급)	100.0 (1등급)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3	3(6)			100 (1등급)	100.0 (1등급)
9	환경권 보장	4	4(8)			100(1등급)	87.5 (2 급)
10	소비자인권 보호	10	5(10)	5(5)		75 (3등급)	100.0 (1등급)
합 계		97	82(164)	15(15)		92.3 (1등급)	96.7 (1등급)